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리더의 정책제안

[발제자]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

[일 시] 2018년 02월 22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27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2017년 8월에 전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8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적 분위기(32.1%),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24.2%), △사회 양극화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14.7%), △학벌,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10.1%)으로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느끼는 회의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청년 78.3%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10년 후 본인의 계층 상승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74.9%가 ‘가능하다’, 25.1%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청년들은 현상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미래에서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답변과 같이 한국인 특유의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가 정책을 펼쳤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 정책은 항상 후행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2.6%에 달하는 청년들(남성 77.8%, 여성 89.7%)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에서도 알 수 있다.

■ 젊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청년정책 4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전략과 청년전략이 정렬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서 전략을 시행할 때 청소년·영유아 전략, 청년전략, 국가전략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정렬되어있지 않다. 이를 교육, 문화, 창업 등을 매개체로 각각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렬시켜야 한다. 둘째, 이행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연령별 고민이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대학 졸업이나 구직 여부 등에 따라 나뉘인다. 대학입학을 해도 반수나 편입, 재수 등을 할 수도 있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준비를 하느냐, 취직을 하느냐, 이직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고민의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재학생이면 국가장학금, 졸업생이면 구직장려금으로 단순화 시킬 것이 아니라 독특한 공통점이나 상태에 따라 국가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적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청년정책이 부처별 정책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정부정책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청년정책을 교육·주거·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신뢰와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현 정부는 청년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 사회문화적 인식, 부모세대와 인식 격차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활력을 미래발전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유인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청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26.2%의 청년들이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적인 나라’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23.7%)’를 청년들이 선택했다. 근소한 차이로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22.6%)’도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응답 순서는 비슷했으나 연령과 직무 상태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21~25세 해당하는 연령대가 낮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일수록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3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중점을 두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선택의 차이를 둘 확률이 높다. 이점이 청년 각각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정책과 지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이다.

■ 앞으로 청년들이 가져야 할 역할과 자세는 무엇일까? 청년은 ‘스스로 주체적인 삶과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자세(46.7%)’로 살아가기 원한다. 또한 ‘제대로 된 인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자세(23.3%)’로 살아가는 것도 청년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답답한 환경이지만 주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청년들의 인식이다.

◆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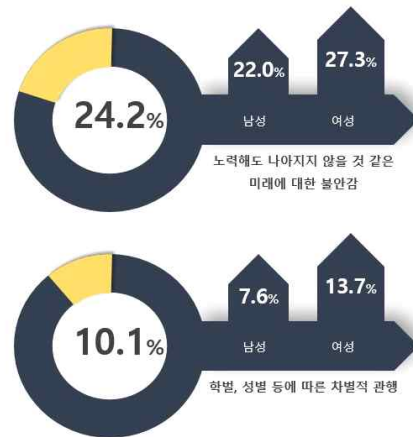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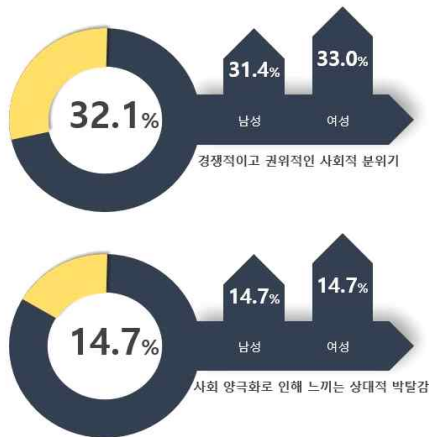
: 공무원 시험은 '안정'이 아닌 '절박함'의 표상

- 2017년 8월에 전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 8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적 분위기(32.1%),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24.2%), △사회 양극화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14.7%), △학벌,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10.1%)순이었다. 개괄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느끼는 회의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청년 78.3%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10년 후 본인의 계층 상승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74.9%가 '가능하다', 25.1%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답변과 같이 한국인 특유의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왜 청년활력제고인가?

한국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자료: 이광형, 정현호, 송보희, 청년희망전략 청년희망실태조사,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미발간자료

-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던 발언 중 하나가 “내 노력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무원 시험이다.”라는 항목이었다. 2017년 6월 서울시 7·9급 공채 시험에 13만9,049명이 접수했고, 평균 경쟁률 86.2:1이었다. 합격하기 희박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그저 안정만을 취하려는 무기력함이 아닌 더 이상 낙오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의 표상이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 49.9%(남성 46.1%, 여성 55.4%)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근무 청년들은 △무기력(39.8%), △불안(38.4%), △우울함(34.4%)을, 비정규직 근무 청년들은 △불안

(54.1%), △무기력(39.5%), △우울함(38.0%)를 중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까지 해소하지 못함은 물론 청년들의 욕구와 현실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2.6%에 달하는 청년들(남성 77.8%, 여성 89.7%)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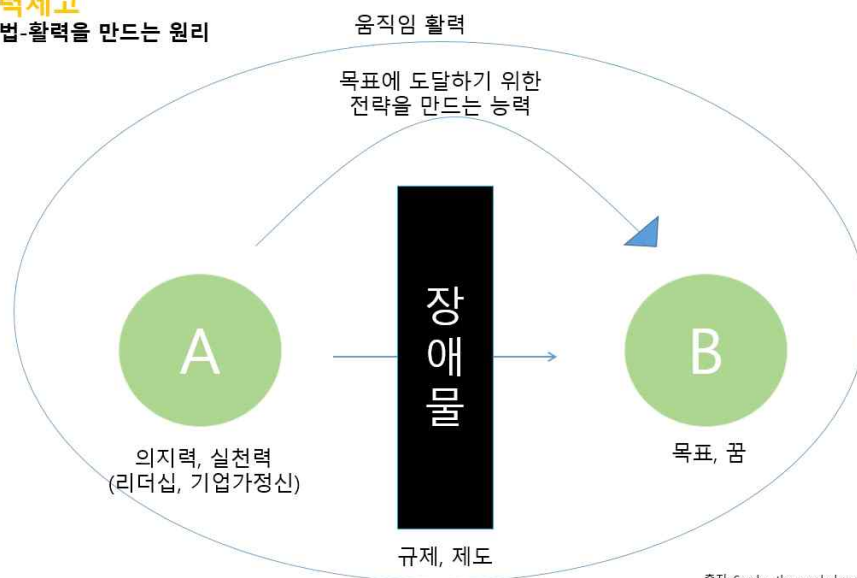
◆ 청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

: 활력을 만드는 원리 3가지, 목표·의지력·대안을 찾는 힘

- ◆ 청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 3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목표가 필요하다. 둘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력이다.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 추진하는 힘이다. 셋째,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때 대안을 찾는 경로를 찾는 힘이다. 장애물이 너무 클 경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움직임이 모아지면 이는 개개인의 움직임의 합이 집단이 움직이는 모습이 된다. 결국 목표가 이뤄지고, 꿈꾸는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청년활력제고

접근법-활력을 만드는 원리



출처: Snyder, the psychology of Hope, 1991 수정보완

- ◆ 지금까지 2조 원에 달하는 청년정책 예산이 쓰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전략과 청년전략의 탈 정렬(mis-aligned), △청년정책이 기존 정책과 통합·연계·융합

이 안 되는 점, △청년사회의 다분화(Multi-differentiation)와 비효율, △청년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등 네 가지가 원인이다. 젊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청년정책 4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전략과 청년전략이 정렬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서 전략을 시행할 때 청소년·영유아 전략, 청년전략, 국가전략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정렬되어있지 않다. 이를 교육, 문화, 창업 등을 매개체로 각각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렬시켜야 한다. 둘째, 이행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연령별 고민이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대학 졸업이나 구직 여부 등에 따라 나뉜다. 대학입학을 해도 반수나 편입, 재수 등을 할 수도 있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준비를 하느냐, 취직을 하느냐, 이직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고민의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재학생이면 국가장학금, 졸업생이면 구직장려금으로 단순화 시킬 것이 아니라 독특한 공통점이나 상태에 따라 국가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적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청년정책이 정부 정책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정부정책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청년정책을 교육·주거·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뢰와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현 정부는 청년의 욕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 사회문화적 인식, 부모세대와 인식 격차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활력을 미래발전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유인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 청년 지원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 정치·경제·사회 생태계를 청년의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 ◆ ‘청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26.2%의 청년들이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적인 나라’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23.7%)’를 청년들이 선택했다. 근소한 차이로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22.6%)’도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응답 순서는 비슷했으나 연령과 직무 상태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21~25세 해당하는 연령대가 낮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일수록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3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중점을 두었다. 자신의 경험

에 따라 선택의 차이를 둘 확률이 높다. 이점이 청년 각각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정책과 지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이다.

젊은 대한민국 건설-청년활력제고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모습은(%)?

1위: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적인 나라

2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3위: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4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5위: 타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자료: 이광형, 정현호, 송보희, 청년희망전략 청년희망실태조사,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미발간자료

- ◆ 정치·경제·사회 생태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꿔갔으면 한다. 정치생태계는 선거개혁, 정당개혁, 정부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선거개혁은 정치참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 지방선거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지역구내 4선 이상하신 분들은 다른 역할을 하시고, 청년들이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 ◆ 2016년부터 청년희망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정책 기획 및 정책 집행의 역할, 책무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정의와 정신,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명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기본법은 청년과 사회에 대한 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청년은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복지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기획 및 수립단계에서 청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단위 기구의 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비율 30%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으면 한다.
- ◆ IT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단 2분 만에 전자 투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을 상당히 아낄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스타트업이 창업한 기술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루비오’이다.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 본인이 찬성

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만에 있는 한 정치스타트업은 정부 정책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한 개발도상국에서 ‘우버가 자국이 필요한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투표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정치스타트업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국회톡톡’, ‘누드대통령’, ‘박근혜닷컴’이 그 예이다. 국회톡톡은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그 정책을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몰카방지법이 국회 법안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누드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유권자가 어떤 대선 후보와 정책 성향이 맞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박근혜닷컴은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욕구를 파고든 서비스이다. 자신이 사는 곳을 기입하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탄핵청원 메일이 가도록 하는 서비스로, 약 93만 통의 메일이 전달이 되었다.

◆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청년 모임, ‘내오’ : 공동체자유주의 2.0을 준비하다

- ◆ 앞으로 청년들이 가져야 할 역할과 자세는 무엇일까? 청년은 ‘스스로 주체적인 삶과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자세(46.7%)’로 살아가기 원한다. 또한 ‘제대로 된 인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자세(23.3%)’로 살아가는 것도 청년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불공정하고 답답한 환경이지만 주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청년들의 인식이다.
- ◆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현하고자 ‘내일을위한오늘’, 일명 ‘내오(NEO)’라는 청년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 주소가 NEO + Society 를 결합하여 만든 Neociety 이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뜻이다. 내오가 고민하는 것들이 ‘공동체자유주의2.0’이라 생각한다. 내오는 ‘기획홍보’, ‘정책활동’, ‘세미나’, ‘정책연구’, ‘운영’, ‘전략’ 등 총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청년·전문가가 결합된 모임이다. 모든 결정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시니어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 운영위 대부분이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청년들도 청년리더십, 정책리더십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배워가는 중이다. 향후에는 정책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내오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1] 현재 내오 인원 총원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오만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답변 1] 내오 인원은 현재 72명이고, 전문가 시니어 12명, 청년 60명이다. 현재까지는 정치, 정책 분야 쪽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올해 3월에 공개적으로 오픈해 모집할 계획이다. 내오만이 가진 매력은 ‘청년과 전문가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만 국회 용역을 2개나 진행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청년의 시각에 관한 연구와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였다. 청년 그룹에는 전문가가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편견을 청년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내오였기에 깰 수 있었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